

“정장 한명이 세월호 참사 책임, 국민 납득 하겠나”

국감 현장

광주교육청 전국최고 불용예산 질타 전남교육청 교사퇴직 대책 촉구 “광주국세청은 고위직 무덤인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전남·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해법과 사립학교 압박 등 교육자치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광주·전남·전북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재 전남도교육감이 국감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일 오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나동균 광주국세청장(맨 오른쪽)과 안동범 대전국세청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광주지·고검, 지·고검에 대한 국정 감사를 벌여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진행상황을 비롯, 부실한 구조 활동에 대한 형사 처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소속 의원들은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했다.

재정 압박에 시달리다면서도 세워진 예산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해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서구갑)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결산’ 자료를 제시하며 광주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불용률이 6.2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비판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편성한 예산 1조8605억원 중 1159억원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 평균 불용률이 2.76%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박해자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불용액 비율이 전국 1위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돈이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특히 불용예산을 예비비로 쌓아두고 있는데 이를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누리과정을 예산 편성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감들이 법규를 틀어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부당성을 따져야 하는데 국고만 지원한다면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동”이라며 “이는 돈만 주면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랐다.”

전남도교육청 젊은 교사들의 중도퇴직 급증사태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박해자 의원은 “최근 5년간 중도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서 올해 전남지역 교원 171명이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의원면직 교원이 48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3.6배나 증가했다. 이들 퇴직자들의 사유는 대부분 광주 등 대도시로 임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지역의 경우 2013년에 의원면직 교사 119명 중 94명이, 2014년에는 171명 중 150명이 타시도 임용시험을 본 후 그만뒀다. 특히 2014년 의원면직자 171명 중 149명이 초등학교원으로 이 중 134명이 타시도 임용으로 인해 중도 퇴직해 초등학교 교원의 이탈이 심각했다. 이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도서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 근무를 꺼리는 젊은 교사들이 이 지역에 많기 때문에 풀이된다. 또 교육대의 정원은 축소되고 시도별 임용자 수는 늘어나면서 임용시험 경쟁률이 낮아지고 임용시험 과목도 객관식 시험이 사라져 현직 교원의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박해자 의원은 “경험있는 교사들의 타시도 유출로 기쁨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도서 및 농어촌 교육의 질이 더욱 낮아지게 된다”며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일 오후 광주지검에서 진행된 광주지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애초 예상처럼 세월호 침몰 참사의 부실한 구조 활동에 대한 형사 처벌 범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의 부실함과 무능력함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 자식이 지금도 바다 속에 있는데, 국가가 아무것도 못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절제 한 뒤 “세월호가 침몰한 뒤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2시간동안 국가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해경 정장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국민이, 가족이 납득하겠나”고 따졌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도 국민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용포 상태에 있는 게 안타깝다”면서 “왜 국가가 구조를 제대로 못했는지, 책임지는 사람도 결과적으로 해경 123명 정장 한 사람 뿐인 점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다”며 적절한 해법을 요구했다.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이와관련, “현장 지휘관으로 지명된 목포해경 123정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반대하는 검사 의견이 많았고 지금도 논란이 있다”고 했다. 임내현 의원은 뒤이어 “목포해경서장,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장 등이 현장 상황을 전혀 몰라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했다. 유병언 사신을 소홀히 취급하면서 ‘전 국민 동원령’까지 내리며 수사력 낭비로 이어진 책임을 언급

하며 “지난해 97건의 신원미상 변사체 중검사가 직접 검사한 게 한 건도 없고 올해도 142건 중 2건만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철래 의원 등은 수사력 총동원에도 불구하고, 유 전 회장 검거 실패 뿐 아니라 밀실 존재 여부, 경찰과의 공조 미흡으로 두 차례나 ‘코앞’에서 놓친 사실 등에 대해 질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음란행위로 논란을 빚었던 김수향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박지현)하는가 하면, ‘세월호 수색작업 과정에서 잠수사 등 11명 희생, 하루수색작업 비용 3억5000만원, 마지막 시신 확인 이후 소요된 300억

원 등’을 언급하며 “이제 할만큼 했으니 세월호 수색을 종료할 때가 되지 않았나(김진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한 지방청장은 이명박 정부 이후 모두 퇴임한 것으로 나타나 광주·전남에 대한 인사차별론이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은 20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8년 이후 광주국세청장으로 근무한 7명이 모두 광주청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했다”며 인사타당 필요성

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전·대구청장의 경우 서울청 국장, 중부청장으로 영전되기도 했고 김덕중 전 국세청장은 대전청장 이임 이후 중부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 발탁됐다”며 “광주청이 타 지방청에 비해 홀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광주청장 자리는 고위공직자의 무덤”이라며 공감을 표시하고 “이는 영남지역 편중인사의 산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국감 이색제안 2제

“세무 수요 폭발적 증가 광산세무서 신설해야”

신계륜 의원 20일 진행된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서광주세무서를 분서(分署)해 광산세무서(가칭)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서광주세무서는 납세인원과 세수가 매년 크게 늘고 각종 민원증명 발급 등 납세서비스 요구와 국제행정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2010년

대비 2013년에 인구 11.9%, 납세인원 27.5%, 세수 70.0%가 각각 증가 하는 등 세무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청은 지난 2011년 초부터 매년 국세청 본청에 분서를 건의해왔고 국세청 본청은 ‘서광주세무서를 분리해 광산세무서를 신설하는 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에도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분서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국세청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조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 다문화가정 학습지 교사제도 도입을”

한선교 의원 20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경기 용인병)은 전남 지역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습지도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장만재 전남도교육감이 전남지역의 학업성취도 하락 요인 중 하나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꾸준한 증가로 교육 과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한 의원은 ‘학습지도사제’를 제안한 것이다. 이는 대도시 사

설교육시장에서 인기를 끈 ‘방문교사’를 의미한다. 학습지도사가 매일 방문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꼼꼼히 챙기는 것으로 공교육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한 의원은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학습지도사가 엄마가 되는 것”이라며 “농어촌이 많아 학생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전남의 교육환경에서 도입해볼만한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열악한 교육재정 탓에 도입이 어렵다면 자신이 적극 나서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만재 전남도교육감은 “재정 여건과 교육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도입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더 높은 한도 더 낮은 저금리 혜택!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최저 연 3.5%~

햇살론대출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아파트 전세 보증금대출 근로자, 직장인 전문직을 위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최고 80% 간단한 대출 절차로 최고 1억원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223-7217, 223-7218

대인본점: 전남예고, 구도청, 밀리오리, 대인마을, 세티은행, 광주신, 대인광정, 유동

총장지점: 구도청, 송파, 우리은행, 연터국장, 삼성생명, 청주일고, 유동, 누문동